북핵 6자회담 내달 8일 재개 — 쟁점과 전망

북핵폐기 로드맵 도출?

초기단계-상응조치 합의 관건…폐쇄 대상 놓고 공방일 듯

차기 6자회담은 과연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의장국 중국이 30일 차기 회담 일정을 공개함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이른바 '북핵 폐기의 2막1장'이 열려 북핵폐기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도출될 것인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회담의 성패는 북한이 취할 핵폐기 초기 조치와 그에 대한 관련국의 상응조치를 담은 합의문이 도출될지 여부에 달렸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미 지난 25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측은 차기 회담에서 초기단계 조치를 문서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자는데 뜻을 같이했고 이 구상은 다른 회담 참가국들에게도 전달됐다.

핵폐기 전체 과정 중 일부인 초기 조치에 합의한 뒤 이를 이행해가며 북한과 나머지 관련국들이 상호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초기조치 이행기간 안에 전체 핵폐기 로드맵을 만들자는 것이 참가국들의 일치된 구상인 것이다.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를 비롯한 일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여부를 확인키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는 선까지는 합의하고 그에 따라 나머지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에 근거, 대북 서면 안전보장, 경제 및 에너지 등을 제공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이 수준의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할지,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핵동결의 의미에 있어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만들 수준의 플루토늄만 보유하고 있던 1994년과 이미 핵실험을 마친 상태에서 핵무기 6~7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7년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런 만큼 초기단계 조치의 실질적 내용을 두고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가동중단 또는 폐쇄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와 IAEA의 감시활동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는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국정원장 군부대 방문 김만복 국정원장이 30일 전방 육군부대를 방문, 군 관계자를 격려한 뒤 장병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이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 처음이다. 〈국정원 제공〉

"공무원 범죄 집권초 급등 '표적사정' 사실로 드러나"

형사정책연구원 분석

지난 40년간 적발된 공무원 범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새 정부 집권 초기에 단속 및 징계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이 아닌 중앙에서 일하는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정부 출범 1~2년 내에 집중 단속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정권 교체 후의 사정 작업이 부패척결 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음이 입증됐다.

◇공무원범죄 집권 초마다 '급증'=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연성진 박사가 1964년부터 2004년까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뇌물 등 전체 공무원 범죄사건의 연도별 추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집권 초기에 범죄 건수가 급증했다.

1964년 5천여건으로 시작한 공무원 범죄 사건 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 급상승 했고 이듬해인 1994년 1만3천여건까지 폭증했다.

이후 1만2천건으로 하락한 범죄 수는 김대중 정부 첫 해인 1998년 사상 최고치인 1만3천490건을 기록했고 이후 9천56건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9천300여건으로 반등했다.

◇중앙·고위 공무원에 집중…처벌은 온정적=이런 '등락' 현상은 지방공무원 보다는 국가공무원에게, 중·하위직 보다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더 뚜렷했다.

전체 공무원 범죄 중 1~3급 공무원들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까지 4% 이하에 머물다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7% 이상이 됐고 1992년 2.9%까지 떨어졌다가 김영삼 정부 집권 2년차인 1994년에 8.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매서운 사정의 칼날을 맞았던 공무원들도 정작 법원에서는 온정적인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한국, 2012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

정부는 2013~14년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0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4일 이를 각 유엔 회원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전하고 "이번 선거는 2012년 제 67차 유엔 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기지개 켜는 전남요트산업

홍행기
사회2부 차장

새로운 레저 스포츠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요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과 경쟁이 해외로 이어지고 있다.

목포와 영광 등 전남지역 자치단체와 마산시와 남해군 등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요트를 운항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요트 관련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연수를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간 실시한 '섬·해안개발 활성화를 위한 해외선진지 연수' 일정에서는 경남을 비롯한 국내 타지역 지자체들의 의욕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부산과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은 황무지에서 세계 최대규모의 요트항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프랑스 그랑모뜨(Grande Motte) 시청을 이미 여러 번 다녀갔다. 또 2~3개 자치단체의 방문일정도 잡혀있다.

또 다른 요트항인 까마르그(Camargue)에도 선진 요트항을 체험하려는 10여 개 자치단체의 연수단이 잇따라 방문하는 바람에 현지 전문가이드를 잡기 위해 지자체간 경쟁을 벌일 정도였다.

목포와 영광, 담양 등 이번 제1기 연수에 참여한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현지의 선진 요트항들을 둘러보곤 그 방대한 규모와 깨끗한 환경 등에 놀라움과 충격을 표시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그랑모뜨와 까마르그를 둘러본 뒤 현장 간부회의를 통해 '목포 북항 계류시설의 설계용역 입찰 보류'를 전격 결정했다. 정 시장은 "북항을 본격적인 요트항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선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성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강종만 영광군수 역시 "이번 연수에서 보고 들은 아이디어를 섬과 해안선 개발에 적용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연수참가자들은 프랑스의 경우 국민소득이 요트를 즐길 수 있을 만큼 높다는 점,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어 해안 관리가 쉽고, 한국 서남해안과 달리 물이 탁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의 섬·해안선 개발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가장 긴 해안선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구체적인 비전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곧바로 망망대해로 이어지며 수평선이 보이는 프랑스 해안과는 달리 한국 서남해안은 섬이 많아 훨씬 인간적이고 친밀한 느낌이 든다"며 "이 같은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 세계적 요트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참가자의 의견은 경청할 만 했다.

/redplane@kwangju.co.kr